

# 오피니언

## 다산포럼

김태희



과연 소통(疏通)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제법 나아진 것이다. 과거에 발인 자체만도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던 시대가 있었다. 입을 막았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행간에 감춰놓은 메시지만으로도 이심전심 교감이 이뤄졌다. 압제자는 엄연한 사실을 감추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부정했다. 배후조종자와 일부 불지각한 자들의 부화뇌동으로 치부했다. 심지어 권 가르기로 공감의 확산을 차단했다. 그런 어두운 시절은 민주화 투쟁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지 않나?

독재자가 몰라나고 발언이 자유로워지고 나니 문제는 달라졌다. 단지 어떤 좋은 뜻만으로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발언이 넘치고 다른 주장이 서로 부딪쳤다. 이제 절대선과 절대악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선(共同善)이 문제였다.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선일까?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 사이에 이뤄지는 대화나 소통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소통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어찌 '악의 무리'와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제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당위이다. 그러나 규범판단과 사실판단은 다르다.

내가 마땅히 선을 추구한다 해도, 사실의 견지에서 내가 100% 선하다는 것은 허위일 수 있다. 저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저들 또한 얼마간 선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악이나 공적인 이념의 문제로 포장하는 것은 구분될 다른 문제이다. 여

## 소통이 문제라면

가서 말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선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다 자칫 안고지고자 폐가 되기 쉽다는 점이다. 극악한 무리와 싸우는 동안 어느새 자신도 극악한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는 결코 소통은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소통의 전제이다.

소통이란 상대방과의 이해와 교감의 의미이다. 간혹 소통의 문제를 홍보의 문제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생각이 나 감정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소통일 수 없다. 소통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쌍방향의 것이다. 메시지 자체가 이미 공감을 이룰 만하다면, 소통의 기

술이나 요령이 도대체 문제될 것이 있을까? 그런데도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로 좋아서 연애하는 청춘 남녀 사이에서조차도 소통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소통의 기술 내지 요령 또한 절실히 문제임이 분명하다.

글쓰기의 대가 연암 박지원은 글쓰기를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에 비유한 바 있다. 글자는 병사요, 글 뜻은 장수로 비유된다. 똑같은 병졸들이, 이끄는 장수가 뛰어나면 승리의 군사가 되고, 이끄는 장수가 무능하면 패배의 군사가 된다. 전쟁의 승패가 장수에 달렸듯, 글의 메시지가 그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취지의 글이 있

## 기 고

다. 글 짓는 자는 항상 길을 잃지 않을까 요령을 얻지 못할까 걱정인데, 뛰어난 장수는 이에 대해 임기응변의 계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했다. 메시지가 공감되기를 바라는 만큼 전달 요령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인은 모두 하나'라는 17분짜리 기초 연설을 하여 단번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특히 그의 연설은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깊고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분열과 투쟁을 부추기는 우리의 연설 상황과 대비된다. 연설에 뛰어난 오바마도 정치인 초년병 시절엔 자신의 연설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연설 스타일을 바꿔야 했다고 한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전달 요령도 중요한 것이다.

소통의 기술이나 요령은 문화의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인 것이다. 내가 알기론 유럽이나 미국이 동아시아에 비해 연설문화가 더 발전되어 있다. 서구문화의 근간인 그리스문화에서 연유한다.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폴리스의 문제에 관해 직접 다수의 청중에게 호소하는 연설문화를 발전시켰다. 이에 비해,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를 아는 지식층들 사이의 공론에서 상소문(上疏文)과 같이 한자로 쓴 글이 위력을 발휘했다. 독재자의 일방적 담화문만이 허용될 뿐, 필화사건이나 '막걸리 보안법위반사건'이 벌어지고, 중국엔 극렬한 저항밖에 택할 수 없는 곳에서 소통의 문화가 발전할 수 없다. 소통의 기술이 문화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소통을 위해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마음이 통하려는 자세를 갖췄는데도 소통이 문제라면, 그 요령을 연구하고 훈련해야 한다. 주역의 '계사전'에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는 구절이 있다. 안과 밖이 통하지 않고 막힌 상태란 죽음을 뜻한다. 통하려면 변해야 하고, 그것은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지방은 문화 향유할 권리조차 없는가

한국 사회에서 지방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조차 없는가 보다. 문화예술 분야 관련 예산을 서울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8년 문화 지원 사업 지역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지원금 851억7천만원 가운데 서울이 전체 35.44%인 301억9천만원을 차지했다. 전국 공영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318억6천만원(37.4%)도 대부분 서울에서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문화예술훈원금의 사실상 서울의 주머니속인 셈이다. 지방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들러리로 불과한 것이다.

광주의 지원액을 보면 '문화수도'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광주의 지원 총액은 7억4천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87%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대구 지원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전의 60% 수준이다.

문화예술 지원의 서울 편중은 내년에 도 여전하다. 2010년도 지역문화지원

중 가장 큰 몫인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은 총 133억원 중 50억원을 서울에 우선 할당했다. 또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44억 원)은 지역 할당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몰아 주려는 속셈이 들여다보이는 듯하다.

한국문화예술위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인적 구성부터 바뀌어야 한다. 11명 가운데 단 1명뿐인 지방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과 지방 간 문화 격차를 줄이지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취지는 허울 좋은 명분용일 뿐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내년도 지방 확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지방 문화예술인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 혼자 자서 다 해먹는 나라, 지방의 절대적 희생 위에 독점과 편중이 '선택과 집중'으로 미화되는 나라, 지방을 무시한 나라의 미래는 너무 밝다.

### 한-EU FTA 대비 농가대책 서둘러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자유 무역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년여 동안 30여 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거친 한-EU FTA는 유럽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EU의 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퀼트 총리가 타결을 공식 선언하게 된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인구 5억 명에 GDP(총생산)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제 1의 시장이다. 우리와의 교역은 지난해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흑자도 182억 달러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 타결로 GDP 15조원, 수출 65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은 발효 뒤 부작용을 발견되더라도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최혜국 대우 보장도 논란거리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

동으로 유럽연합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가전과 자동차 분야는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EU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축산업과 화학, 기계류 등은 충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남 도내 양돈 농가와 낙농가 등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미 유럽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관세까지 철폐될 경우 국내산 절반 가격에 흥수 출하돼 1천190여 전남양돈농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양돈협회 등은 국내 농가 피해 규모가 최대 1조5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 축산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과 축사시설 개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축산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無 等 鼓

중국의 역사는 분열과 통합의 연속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첫 통일 국가는 기원전 221년 시황제에 의해 세워진 진(秦)나라였다. 이어 한(漢)을 거친 통일 중국은 연속 분열했다. 삼국시대(위, 촉한, 오)를 지나 진(晉)과 수, 당, 송, 원, 명, 청을 지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共)에 이어 다시 한 번 통일국가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중국이 해쳐 모여를 계속 한 것은 아마도 국토가 광활하고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면적(22만km)의 44배에 이르는 광활한 국토(957만km)와 56개 민족 13억여명의 지역과 민족의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중국의 왕정체제는 당연히 귀족과 평민의 수탈관계와 더불어 특정 민족의 집권에 따른 이민족 탄압사를 반복한다. 즉, 몽골(元), 만주(滿)족 등 특정 세력이 패권을 잡았을 때 다른 민족은 극심한 수난에 시달렸다.

최근 외신을 장식하고 있는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시위사태도 이같은 중국 민족갈등의 한 징표로 해석된다. 중국인이 처음 신장을 지배한 것은 8세기부터였다. 이어 750년대에 들어 당(唐)나라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자 신장의 주도인 우무무치는 위구르족이 차지했다. 이슬람교도의 반란으로 1864년 우무무치는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으나, 1876년 청군(淸軍)이 극적으로 되찾았다. 1884년 신장이 성(省)으로 되면서 우무무치는 성도가 돼 중앙 아시아의 교역 중심지로 급성장했다. 청대 말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신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어 따라 우무무치의 중요성과 국제적 의미가 높아져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신장은 분리독립운동의 본산인 티벳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이질적인 곳이다. 우무무치에서 총성이 계속 들리면 한 민족의 정당한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는 셈이다.

신장웨이우얼의 시위사태도 이같은 중국 민족갈등의 한 징표로 해석된다.

신장은 분리독립운동의 본산인 티벳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이질적인 곳이다. 우무무치에서 총성이 계속 들리면 한 민족의 정당한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는 셈이다.

최근 외신을 장식하고 있는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시위사태도 이같은 중국 민족갈등의 한 징표로 해석된다.



신장웨이우얼의 시위사태도 이같은 중국 민족갈등의 한 징표로 해석된다.

신장은 분리독립운동의 본산인 티벳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이질적인 곳이다. 우무무치에서 총성이 계속 들리면 한 민족의 정당한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는 셈이다.

신장웨이우얼의 시위사태도 이같은 중국 민족갈등의 한 징표로 해석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이천영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외국인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그 의미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문제를 살피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이주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과거 노동이주의 대량이주를 통한 이민 형태와 달리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인력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기체류 형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 형태도 다

분의 1로 줄어들고 2200년에는 총인구가 14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한민족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결국, 인구가 줄면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 하게 되고,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보존 정책이 뒤따를 것이며, 한국은 완전한 다민족국가 가 될 것이다.

### 이주민 500만명 시대를 대비하자

양해지고 있다. 저속된 노동자로부터 이제는 고급 전문인력 유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이민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말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연령층인 15~49세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로 측정하는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1.2명이었다. 홍콩이 비록 0.96명이나 도시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현재 인구의 3

이주자 100만명 시대가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2020년 이주자 50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통합 정책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이민 형태인 영주자, 전문기술인력, 단순 생산가능 인력, 외국인 유학생, 난민, 불법체류자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게 집중되는 사회통합 정책조차 이주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되짚어 볼 부분이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아니라 이주자와 내국인 쌍방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통합은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통합의 과정이지 일방적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소장〉

## 기 고

윤복식



광주시가 고령화와 신 노년시대에 맞춰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노인전문 복합 문화시설인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지난 6월10일 개원한 지 1개월을 맞았다.

이에 광주시 노인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매일 오전 일찍부터 노인타운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노인들이 독차지하고, 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첫 출발지점에서 벌써 만원이다.

2일에 한 번씩 노인타운을 찾고 있는 김영두(74세 광주 남구 진월동 거주)씨는 이웃친구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며 종사자들이 아주 친절하고 친절하게 해주어서 노인들이 대접받는 천국이 되었다면서 단돈 1천 원으로 푸짐한 점심을 먹으며 한곳에서 모든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광주시민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요, 자랑이라면서 1등 광주 1등 시민의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매우 기뻐하고

###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1개월을 맞아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 따르면 9일 현재 지난달 10일 개원 이후 이곳 타운을 이용한 노인은 8만명 이상 하루 평균 4천여 명 가량으로 집계됐으며 60세 이상 등록회원 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나 기타복지관 등에서 할 일없이 여가하며 시간을 보내던 노인들이 이제는 노인타운을 찾아 당구나 탁구, 장기, 바둑 등 체육시설 및 취미클럽 등에서 게임을 즐기며 목욕을 한 뒤 1천 원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컴퓨터실이나 노래방 등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특히 타운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400~1천5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복지관은 700~800명이 모이며 물리치료실은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노인들로 시끌벅적하다.

또한 노래방 등의 여가시설이 있는 문화관은 1천여 명이 다다르며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체육관은 하루 평균 400~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있다.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매우 높다. 서울시와 충청북도를 비롯한 타 시·도 자치단체는 물론 대구 카톨릭대, 숭실대, 광주대학 등 관계자들이 최근 시설을 방문하여 타운의 운영, 관리 실태와 설립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등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어 우리 광주가 노인전문복지시설의 모델이 되고 있다.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원장님과 주무부서 분장장은 매일 시설을 순회하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타운을 찾는 모든 분들이 매우 흐뭇해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프라확충과 노인의 사회활동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는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 이동용 포장마차 가스통 '폭발 위험' 제재 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동용 포장마차 나 닭집이, 어묵 등을 파는 상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용하는 조리기구용 가스가 늘 걱정된다. 이런 포장마차에서는 음식 조리용 전부 LPG로 한다. 하지만 커다란 LPG가스통에 고부 호스만 달려 끼워서 조리기구로 옮겨 사용 하다 보면 안전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통과 조리용 가스레인지와는 거리가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도 바로 옆에 붙여놓고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다가 가스통이 열을 받아 과열되면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가스가 새 경우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가스 안전장치도 달아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축제장 음식 포장마차들이 전부 다 한곳에 밀집돼 있어 연쇄 사고가 위험이 더욱 크다.

가스 사용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가스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가스 자동 잠금 같은 것을 설치해 해야 할 것이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 운수로 쓰이는 비 年 27% 불과...저수지 더 준설해야

남부지방에 또 폭탄이 쏟아졌다. 봄에는 거북등처럼 메마르도록 비가 안 오다 장마철에는 주택 수백채가 침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연간 강수량의 27% 정도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손실되거나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본다.

이 농업용 저수지 준설은 농업용 수자원을 확보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수자원을 확보한다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공업용수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비 온 뒤 바다로 흘러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가두어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자치단체와 정부는 당장 저수지 준설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영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